

‘병원 폐기물 분리배출’ 발생량 감소 효과 봤다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 간담회
광주·전남 7곳 등 을 전국 45개 대형병원 참여
5~8월 전년비 1.69% ↓...비 참여병원 4.83% 증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의 저감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해 처리시설 용량이 한계에 달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은 총 13곳으로 호남권 2곳(광주·장흥 각1곳), 수도권 3곳, 충청권 3곳, 영남권 5곳으로 강원과 제주에는 시설 자체가 없다.

최근 순천 서면 구상리와 여수 묘도동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움직임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

857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22t에 비해 1.69% 줄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병원들의 일반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같은 기간 1만 5122t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만4426t보다 4.8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이 사업이 폐기물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환경공단은 설명했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은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과 일반 쓰레기를 정확히 분리해 버리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기기 및 약품 포장용기, 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되거나 닿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 링거백, 입원환자나 내원객이 배출하는 쓰레기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닌데도 그동안 의료폐기물과 섞여서 배출되다 보니 모두 함께 의료폐기물로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며,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용용기로 배출해 밀폐 상태로 보관해 전용 차량으로 수집·운반되며, 전용 소각시설 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참여 45개 대형 종합병원과 시범사업 진행상황과 성과점검, 우수사례 공유와 소통의 장을 위해 준비됐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이 ‘분리배출 시범사업 저감 활동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는 12월에 의료폐기물 감축 실적과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병원 포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흑산도 암동마을 안길 가꾸기 국립공원 마을지원단 70명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직원들이 최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 흑산도 암동마을의 입구 등을 덮고 있는 칠펙풀을 제거하고 있다. 2일간 진행된 작업에서 총 8000㎡의 칠펙풀을 제거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제공>

1년 1회 내던 하천수 사용료 기간별 납부로 개선

과도한 부담 개선·하천수 배분 효율성 증대

하루에 최대 사용 양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내오던 하천수 사용료를 앞으로는 기간별 사용량을 계산해 쓴 만큼 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는 ‘사

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하천법의 하위 행정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하천수가 세부기준을 마련,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일부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하천수 배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설명했다. 기존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 신청을 낼 때 최대한 적게 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사용자가

1년 중 물을 가장 많이 쓴 날의 양에 365를 곱해 1년 단위로 부과됐다. 하천수를 쓰지 않은 기간에도 사용료를 내야 했던 셈이다. 하지만 바뀐 시행령과 새로 제정되는 고시를 적용하면 사용기간별 계산된 사용료만 내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5000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연액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 당 금액으로 표시해 이해하기 쉽게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사랑그림 수상작 22점 선정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영산강유역환경청)는 “2019 환경사랑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22점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강’이라는 주제로 영산강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작은 초등 저학년 7점, 초등 고학년 8점, 중·고등부, 7점 등으로 구성됐다.

수상작은 시각적, 정신적인 정화를 시켜주는 아이들의 이미지를 통해 환경사랑에 대한 동심을 느낄 수 있었고,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다양한 기법으로 잘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우리의 손으로 가꾸어 나가는 강’ (송원초 천예림 작)은 환경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수상작은 2020년 달력으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북구, 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특별 단속

이달까지 제조업체·민원 발생 사업장 대상 집중

광주시 북구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과 기술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관내 공장, 제조업체 및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 업소를 선정하고, 이번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집중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기타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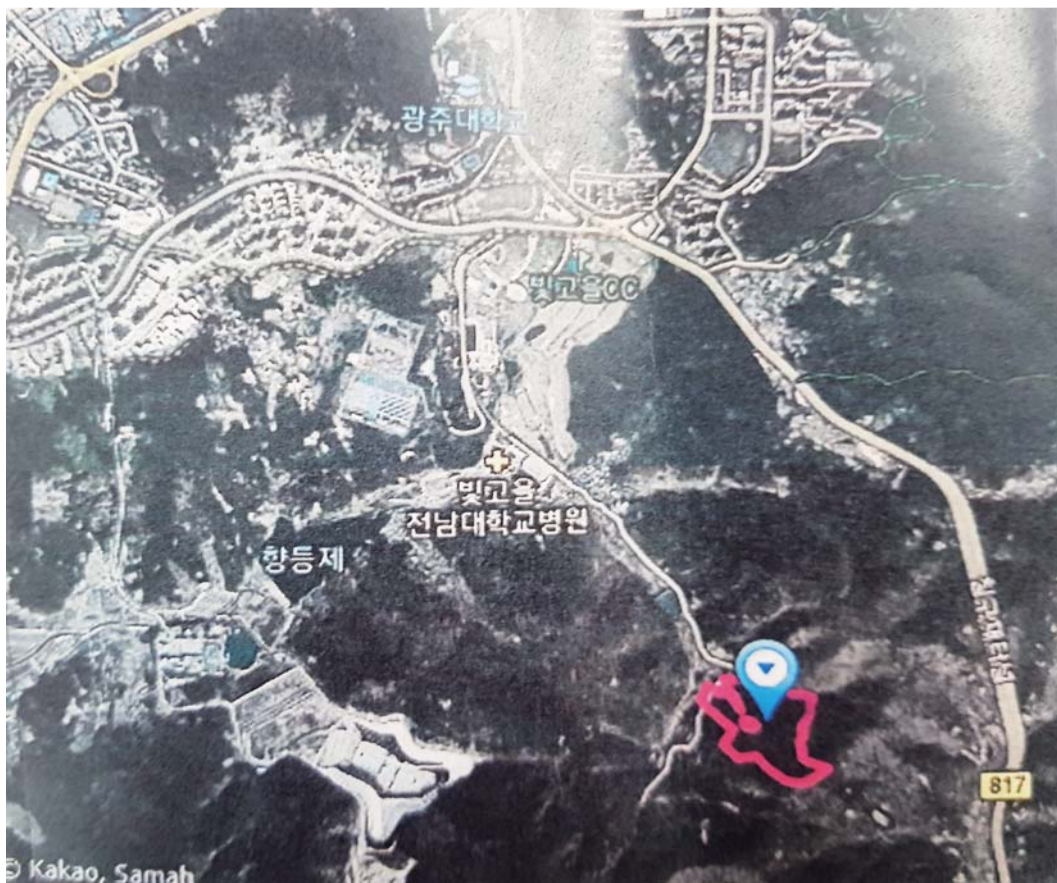
북구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북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 총 12곳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진단 ▲시설운영 방법 ▲시설관리 규정 등을 안내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적극 근절하고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